

이 보도자료는 2019. 3. 5.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검찰청 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/팩스 02-3480-2704

## 보도자료

2019. 3. 5.(화)

자료문의 :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

전화번호 : 02-3480-2853

주책임자 : TF 팀장 김형수

제 목

## 대검찰청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 출범

- 대검찰청은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9. 3. 5.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를 출범하였음
  -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전문연구관,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
- 다단계·유사수신, 불법사금융, 재개발·재건축 비리, 가상통화·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,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
  -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여 종합 대응체제 구축
- 향후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를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음

I

### 현판식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19. 3. 5.(화) 11:00, 대검찰청 본관 314호
- 주요 참석자
  - 검찰총장, 차장검사, 형사부장 등 부·본부장 7명, 형사1·2과장 등
  - TF팀 관계자(TF 팀장, 전문연구관, 검찰수사관 2명, 실무관 1명)

## II

#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 신설 배경

- 최근 가상통화, P2P,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·사기범죄 급증

※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·상담건수 '16년 53건→'17년 453건(자료: 금융감독원)

-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재개발·재건축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리, 이중·삼중 분양사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

▶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. 법으로 규제하여 주시길..('18. 10. 청와대 국민청원)

“다단계 방식으로 불쌍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.”

▶ 가짜 골드바탕 담보로 투자자 홀린 P2P업체들·피해액 1000억('18. 11. 19.자 언론보도)

“가짜 골드바탕 허위 부동산, 태양광 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개인간거래 (P2P)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. 피해규모만 수만명,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.”

▶ 내집 마련, 급한 마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샀다가 망했다('18. 2. 21.자 언론보도)

“조합은 최대 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고 사업도 중단됐다. 사업 진행 중 집행부 비리나 조합원간 갈등이 일어나면 모든 피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.”

- 아울러 다단계, 유사수신, 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

※ '18년도 다단계·유사수신 검찰 접수인원 4,591명('15년 대비 2.4배 증가)

### 주요 검찰 수사사례

▶ 가상통화 투자 사기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명에게 총 109억원의 피해 야기 ('18. 6. 대구서부지청, 다단계업체 적발, 31명 기소)

▶ P2P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로 투자자 1만2천여명에게 700억원의 피해 발생 ('18. 10. 수원지검, 대부업체 적발, 8명 기소)

▶ 부동산 개발업자가 허위계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340억원의 손해 야기 ('19. 1. 창원지검, 개발업자 등 10명 기소)

- 서민다중피해범죄의 경우,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·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여 전문적·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
-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 구축 필요

### Ⅲ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의 역할

#### ① 서민피해에 대해 수사부터 피해회복에 이르는 ‘종합시스템’ 구축

- 피해발생 초기부터 「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」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 구축
  - 대량피해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,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노하우를 수집·전파
-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,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하여 사건의 종국적 해결 도모
  -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하여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하고, 피해재산 환부제도,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 제공

#### < 체계적 종합시스템 구축 >



## ②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(Hub) 역할

- 서민다중피해범죄의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회 소속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상시적으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·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, 일선청에 전파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일선 청 사이의 허브 역할 수행

## ③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

-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형사정책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
  -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은 가능하나,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·추징의 대상에서 제외
  -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동결, 피해재산의 몰수·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종합대책 수립 추진

## IV 향후 계획

-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및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하여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,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